

#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2022. 2. 23.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2월 23일(수) 14:00~18:1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 2022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2호 『부국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23호 『○○○○○○○○○○○○○○유한회사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금감원에서는 본 건 자금이 여유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 명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것은 선·후순위 사채의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후에만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표현은 사실 어떤 문서나 규정에도 나와 있지는 않음. 그리고 만약 저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산유동화법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소명하는 보충서면을 작년 12월에 제출을 한 바가 있음. 이번에 증선위에 앞서서 제가 의견진술서를 추가로 제출을 드리면서 같은 운용사의 다른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동화회사에서 동일한 형태의 여유자금 운용이 있었는데 만약 본 건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동일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추가 진술하였음. 또한 유동화법 제41조에 행위자는 물론 소속된 법인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음. 따라서 만약에 이 사안이 문제가 되고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 법인에게도 본인과 동일한 수준의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요청드립니다.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원래 업무 위탁자나 유동화회사는 법률적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인지?

- (보고자) 법률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고, 업무위탁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수탁자를 사용한 사용인으로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하지만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위탁과 관련해서 형사적인 벌칙이나 제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임.
- (위원) 이것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다면 결국 다 밑으로 내리면 위에는 다 빠져 나가게 됨. 계산 주체, 손익의 귀속주체는 유동화회사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하방으로 내려가는 결과만 남는 것 같아서 이것이 약간 기형적이라는 느낌이 듭.
- (보고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면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해서 업무위탁의 제한이나 업무수탁자를 제한하는 법규정을 두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어야 할 것 같음.
- (참여자) 법리구성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음. 기본적으로 SPC가 행위 주체이고 실행위자가 누구냐를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음. 즉, 실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는 법률상의 조항이 제40조 조항이 아니라 제41조가 실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이고, 제40조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임. 그런데 법인이니까 징역형 이런 것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제41조로 가고 실행위자는 제40조와 연동이 되어서 징역형이나 이런 것을 처벌 할 수 있는 것이니

까 향후에 법리구성할 때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음.

- (위원) 저도 가졌던 의문을 하나 더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경우에는 대리인한테 그 권한이 넘어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함. 이 경우에는 SPC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대리인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했다면 ○○○(주)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case)임에도 불구하고 운용했다는 것을 대리인인 ○○○(주)가 알았다면 유동화회사인 이 SPC도 당연히 알았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사실 있는 것임. 그러니까 ○○○(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실제 행위자로 보면서 그 사람은 ○○○(주) 소속직원의 직위에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를 대리인의 지위로 봐야 되고 양별규정 역시 제가 볼 때는 본인을 유동화회사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직원을 행위자로 보고 정작 양별규정은 대리인인 ○○○(주)를 양별 적용하는 것이 되어서 좀 어색한 느낌이 솔직히 드는 것은 사실임.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희 ○○○(주)는 ○○○○○○○○○○○○○○○유한회사의 모든 자금송금 업무 건에 대해 △△△△ △△△△△△△ 전원이 포함된 자금인출집행승인 Email을 받았을 경우에만 자금송금업무를 하였음. 이러한 자금송금업무는 △△△△ △△△△△△△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하는 단순 사무보조업무이지, 저희 ○○○(주) 자

체적으로 어떤 자금인출집행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닌 업무임. 저희 ○○○(주)가 임의적으로 자체 판단하여 자금송금한 건은 5년 여 기간 동안 단 한 건도 없음. 저희 ○○○(주)는 어떤 한 사람의 지시만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Email 혹은 전화 받는 등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도 않았음. 이러한 저희의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5호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1년 단위로 계속 예외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1년 단위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 (보고자) 국민연금에 하고 있는 예외 인정 요건 중에 하나인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정성 유지, 규정에 따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 저희도 예외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위원) 실제로 지난해에 반환 예외로 인정을 받아서 6개월 단차이익 한 것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있는지?

- (보고자) 실제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사례(case)는 없었음.

○ (위원) 단차매매차익 반환을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 연금법이 국민연금 이외에 또 어디가 있는지?

- (보고자) 현재는 없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전 제6호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처리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26호 『(주)에이치에스애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7호 『(주)지투알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양사 모두 일개 직원의 횡령에 의해서 수백억 원의 손실을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자이고 동 횡령 사실을 저희가 인지한 즉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하였으며,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양사를 포함하여 과징금 35억 원의 부과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이 됨. 위반행위와 관련된 동기판단은 법규에서 정해진 의무에 일탈한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음. 외감 법규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모회사인 (주)지투알은 개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당시 자회사인 (주)에이치에스애드는 비상장기업으로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 허용된 상황에서 자회사에서 발생한 횡령을 발견하지 못했던

행위가 외감 법규 등에서 정해진 의무와 비교할 때 양사 모두에게 일반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과실’로 처분하는 것은 과중함. 더군다나 본 건의 감리지적은 (주)에이치에스애드에 대해 발생한 1건의 횡령에 기인한 것임에도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에 대해 각각 1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중적인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음.

- ▶ (진술인) (주)지투알은 상장기업으로서 외감법에 따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해 왔으며,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없음. 횡령사건이 발생한 종속기업인 (주)에이치에스애드는 (주)지투알이 100% 소유한 회사로 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완화된 방식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었음.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횡령은 당사 종업원이 종속기업의 자금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과정에서 ERP시스템상 허위로 거래처 및 계좌를 등록하고 전표를 생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년 10억 원에서 40억 원씩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음. 그리고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광고업의 특성상 회사 규모에 비해 채권·채무회전량이 매우 크고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지속하던 상황이라 채무금액의 이상(異常)을 분석적 검토로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에 따라 20년간 수행되어 온 국내 Big4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와 횡령기간동안 2차례나 있었던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강도 높은 재무실사 중에서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횡령 방식의 교묘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다음으로는 위법동기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동 건은 회계기준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지투알의 위반동기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주)지투알의 CEO, CFO가 종속기업에서 겸임했다는 이유로 종속기업의 위반동기를 당사에 적용하는 것은 책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함. 더군다나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검토, 감독업무 부실이 (주)지투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으로 치환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 회사가 회사관계자의 회계부정을 신고하였고 과징금 부과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당사는 횡령 인지 즉시 이에 대해 공시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 감리지적은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단일 횡령사실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지배회사인 (주)지투알과 종속회사에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적 금전제재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 (진술인) 법률대리인임. 첫째로 회사가 회계처리나 회계기준 적용 자체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회사가 그 범죄의 피해자라는 측면도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두 번째로 이 건은 하나의 횡령행위로 인해서 자회사의 별도재무제표

에 회계처리위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자동적인 결과로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도 동일한 회계처리 위반이 발생한 건임. 사실상 하나의 회계처리위반임에도 자회사와 모회사 각각 과징금을 두 번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생각이 듭. 양정기준에서도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와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모두 관련된 경우에는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서 중한 조치 하나만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함. 셋째로 자회사가 위반한 의무는 직원의 관리감독의무 또는 자금관련 내부통제의무라는 주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이지만 모회사가 위반한 의무는 자회사 관리감독이라는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의무임. 자회사의 의무 해태와 모회사의 의무해태에 대한 경중은 엄격히 구분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봄.

- (위원) 외부감사인이 조금 더 정치(精緻)하게 감사를 했으면 발견할 수도 있지 않았는지?
- ▶ (진술인) 기중에 채권과 채무에 대한 확인을 계속 할 수가 없었고, 저희의 채무가 지급이 되고 업체 측에서 그 채무가 해소(clear) 되지 않았다는 요청(claim)을 받았을 때만 저희가 기중에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기말에 채권채무조회서, 어떤 한 시점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를 받아서 정치(精緻)하게 봤다면 이 매입채무 과소계상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함.

- (위원)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1건의 횡령 사실에 2건의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인 금전적 제재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금감원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지금 하나의 원인행위로 비롯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 결과가 종속법인과 지배법인에 공히 미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 시행령과 세칙상에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해서 회사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는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 ▶ (진술인) 양정기준에서도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와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모두 관련된 경우에는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중한 조치 하나만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함.
- (보고자) 2011년도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발생한 위법행위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로 전이되는 경우에 대해서 양정기준의 특례를 만들었음. 그 특례 규정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는 한데, 지배종속기업에 대해서 중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례를 저희가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 각각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배·종속회사 간의 업무관계를 잘 판단하여야 하는데 양사의 임원 겸임 현황이라든지, 어떤 경영관리 영역을 전부 (주)지투알에서 하고 있었던 부분을 봤을 때 각각에 조치를 하는 것이 맞고 그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임.

- ▶ (진술인) (주)지투알과 (주)에이치에스애드 간에 임원 겸임을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자회사 임원 지위에서의 의무 해태와 모회사 임원 지위에서의 의무 해태는 그 내용 전혀 다름.
- (위원) 기억하건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차별적으로 제재한 사례(case)가 있음. 금감원에서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만약에 자회사와 모회사가 임원을 겸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지?
- ▶ (진술인)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임. 고의적인 횡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자회사도 속고 모회사도 속은 경우이기 때문에 겸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회사, 모회사 임원 모두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회계감사기준 240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부정이나 횡령 사건 관련하여 고유의 한계가 있고 또 횡령자가 치밀한 조작으로 외부감사를 무력화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희 감사인

이 ‘중과실’에 이르는 현저한 주의의무는 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 드림. 조치에 대한 고려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음. 첫 번째 사항은 외부감사인으로서 동 횡령사건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임. 저희는 회사가 영위하는 광고영업 특성상 매출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중요감사분야로 수익인식을 선정했었고 또 횡령에 대한 특별한 징후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입채무에 대해서는 중요감사분야로 선정하지 않았던 상황임. 회사의 연간 지급규모가 약 1조 원인 것에 반해서 횡령금액이 연간 지급규모의 0.2~0.3% 수준이었으므로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한 사전위험 파악 절차로는 횡령 징후가 식별되지 않았음. 다음은 횡령 수법이 어떻게 외부감사 절차를 무력화 시켰는지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상계처리를 통해 매입채무조회 샘플에 걸리지 않도록 조작함으로써 감사인의 매입채무조회 절차를 무력화 시켰음. 두 번째는 횡령자가 기중에는 지급어음을 통해서 횡령을 하다가도 기말 기준에는 지급어음 잔액을 맞춤으로 인해 감사인이 은행조회서나 은행연합회 자료 상호 대조 확인절차 하는 부분을 무력화 시켰음. 세 번째는 감사인 적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말감사기간 동안에는 횡령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고기간말 이후 지급기록 검토 절차를 무력화 하였음. 마지막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전표 유형을 통해 횡령을 함으로써 감사인이 횡령 징후를 식별하는 부분을 무력화 시켰음. 횡령수법의 치밀함 때문에 20여년간의 횡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세무조사 그리고 4~5년 주기로 있었던 내부감사, 최대주주 변경

시 수행되었던 두 차례 외부 재무실사 그리고 과거 타 회계법인들의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횡령사건은 적발되지 않았음. 횡령의 징후가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감사인인 수행하는 감사절차로는 치밀한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횡령사건을 발견하는 것에 고유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감사인으로서 매입채무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상 필수적인 절차는 모두 수행했다는 점임. 저희가 취한 절차는 매입채무에 대한 회전을 분석이나 거래처별 증감분석 등 분석적 검토, 매입채무 조회 절차 그리고 보고기간말 이후 지급기록 검토를 포함하는 부외부채테스트임. 다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을 설명 드리겠음. 먼저, Journal Entry 테스트 관련해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음. 회계감사기준 240에 따르면 Journal Entry 테스트의 목적은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대응절차이고 금번 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이나 매입채무 감사 절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다음으로 매입채무 가결산 명세서 이용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결산이 복잡한 회사들의 경우 채권채무조회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권채무계정명세서를 먼저 제공 받고 그 이후에 전체 명세서를 다시 일괄제공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 감사인은 최초에 회사로부터 수령 받은 명세서 합계 잔액과 저희 재무제표상 잔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후 명세서가 다시 제시되는 경우 기준에 제시 받은 명세서와 합계잔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였음. 저희 감사절차는 조회절차나 부외부채테스트 등 감사절차를 통해서 명세서에 문제가 없는지를 발견



하는 절차임. 이런 절차를 수행한 결과 저희가 발견한 오류는 없었음. 해당 시점에서 감사인이 취한 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획한 감사절차를 미수행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저희는 당초 계획한 매입채무 관련 절차를 모두 수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외부채테스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테스트 대상 모집단(1월)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회계감사기준에서는 특정 테스트 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인은 회사 상황에 맞춰 일정한 테스트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감사보고서일까지 대상 모집단을 확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을 발견할 수 없는 한계는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부외부채테스트 보완절차로 매입채무 조회, 특관자 채권채무 조회 절차를 추가 수행했기 때문에 부외부채테스트에 대한 중요한 결함은 없었다고 생각됨. 두 번째는 기간귀속 여부를 회사가 확인하였다고 지적하신 부분인데 실제로 감사인은 현장 감사기간 동안 회사 SAP시스템을 통해서 관련 전표와 증빙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회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은 저희 감사철수이후에 발생한 지급내역에 대해 보완적인 절차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요청 드렸던 부분으로 감사인이 필수적으로 취해야 될 절차는 모두 수행되었음. 결론적으로 매입채무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조서에 담당자의 실수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중대한 감사절차의 누락은 없었고 필수적인 감사절차는 모두 수행된 점 그다음 횡령자의 치밀한 조작으로 감사절차가 일부 무력화된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결재무제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저희는 국내 자회사 두 개가 동일한 관리조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감사 수행 목적으로 동일하게 감사팀을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했음. 회계감사기준 600에 따른 연결감사업무는 모두 수행을 했고 금번 감리에서 연결감사절차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음. 연결감사 과정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그룹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해 ‘중과실’로 두 번의 조치가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 드림. 기타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음. 저희 감사인은 횡령사건 발견 후에 적극적인 재감사를 수행했고 향후 조치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분식을 발견했음. 그리고 내부적으로 매입채무 관련한 감사절차 교육을 강화하였고, 파트너들의 품질관리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개선노력을 했음. 마지막으로 본 건이 치밀한 조작에 의한 횡령사건으로 외부감사인은 정상적인 감사절차로 해당 사건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고유한계가 있었다는 점과 필수적인 감사절차는 중요한 누락 없이 수행되었다는 점과 대상회사는 비상장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도 아니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 금감원에서 지적하는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중과실’, ‘과실’로 나누어질 것 같고 매입채무 잔액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지급테스트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감사절차인지?

▶ (진술인) 매입채무 지급테스트는 통상적인 감사절차가

아님.

- (위원) 그러면 명세서상 개별 거래처 금액과 SAP시스템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감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인지?

▶ (진술인) 개별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는 아님. 샘플 베이스(sample base)로만 확인을 하고 있음.

- (위원) 명세서에 개별 거래처별 리스트(List)가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통상적인 감사절차인지?

▶ (진술인) 통상적인 감사절차가 아님.

- (위원) 연결감사 절차는 제대로 수행을 해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지?

- (보고자) 통상적인 연결감사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지 않았고 별도재무제표에서의 감사절차 소홀로 인해서 연결감사인으로서 연결자기자본 과대계상 발견 못한 점을 지적하였음.

▶ (진술인)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룹감사절차를 모두 수행을 했음. 다만, 종속기업에 있던 재무제표 효과가 연결 쪽에 영향을 미쳐서 조치를 이중으로 받게 되는 사항이 있음.

- (위원) 회계법인 자료에 의하면 'Journal Entry 테스트 목적은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대응절차이며, 금번 직원에 의한 횡령사건 및 매입채무 감사절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절차임' 이것에 대해서 금감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240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책임이 있고 또 Journal Entry 테스트나 이런 감사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마땅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음.
  
- (위원) 그다음에 부외부채 테스트, 후속지급거래인데, 금감원에서 2013년~2018년까지 다 지적했음. 회계법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진술인) 감사현장 철수 전까지는 회사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서 원천증빙도 보고 그 전표가 SAP시스템에 제대로 전기(轉記)되어 있는지 하는 것까지 직접 확인을 했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감사기준에서 특별히 언제까지 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절차는 현장 철수일까지는 저희가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취했던 것이고, 철수 후에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봐 일부 자료는 회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음.

- (보고자) 감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부외부채 조서 이런 내용들을 비교대사를 해 봤더니, 감사인의 업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이 확인되었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제26호 및 제27호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첫째, (주)에이치에스애드는 거액의 자금이 장기간 부당하게 유출된 점을 파악하지 못하여 장기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지만, 모회사 파견 직원의 치밀한 수법으로 인해 발생한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원안의 과징금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외부감사규정』 [별표7] 양정기준 중 감경사유인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20% 추가 감경하겠음. 둘째, 감사인의 경우 감사조서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회사에 적용되는 재무제표 자진수정에 따른 감경사유는 감사인의 조력 없이는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감사인에게도 동일한 감경을 하는 것이 신속한 재무제표 자진수정을 독려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외부감사규정』 [별표7] 양정기준 중 감경사유인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에이치에스애드 및 (주)지투알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을 각각 30%씩 감경하겠음.

○ 각각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6시35분 정회)

(17시04분 속개)

□ 의결안건 제28호 『(주)○○○○○○○○(舊(주)○○○○)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9호 『(주)화승코퍼레이션(舊(주)화승알앤에이)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주)○○○○○○○○ 모회사가 (주)○○○○○○○○이고, (주)○○○○○○○○의 소유주(owner)가 두 회사 대표이사를 다 겸하고 있는 것인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별 이상은 없었는지?

- (보고자) 소유주(owner) ○○○는 그 당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하고 있었고, 이 회사가 부산이 아닌 충남에 있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겸직이 됐어도 주로 공장장과 재무담당 임원이 경영을 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합

□ 의결안건 제21호 『비상장법인의 2019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제21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및 금융감독원에서는 감사인 지정조치가 부과된 피조치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첫째, 금번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안건은 금감원 조사 및 제재절차가 일부 지연된 측면이 있음. 지난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조치가 부과되고, 2개 사업연도 후 감사인 지정이 개시되었음. 금번 제21호 안건의 피조치자들은 2019사업연도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과거처럼 2개 사업연도 후 감사인 지정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감사계약 등의 절차를 준비해 왔을 것임. 그러나 제21호 안건의 경우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상정되었고, 외부감사규정 별표2에 의할 경우 내년에 감사인 지정이 개시되어 피조치자는 감사계약 과정에서 기대이익이 훼손되는 등 애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여 지정사업연도 개시시점을 피조치자가 올해와 내년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둘째, 지난 제3차 증선위에서 의결한 ‘주권상장법인의 2019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안건의 감사인 지정조치도 동

안건 피조치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사인 지정 개시 시점을 올해와 내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0호 『브레인자산운용(주)의 유앤에스파트너스(주)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31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에 대한 조치원인사실을 보면 (주)○○○○이 주선인이고,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펀드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임. 이에 대한 저



회의 의견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본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판단을 내린 것처럼 2017년 10월에 개정이 되고 2018년 5월에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관한 규제는 본 건에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이를 '같은 종류의 증권임'을 판단하는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는 것임. 또 본 건 펀드들을 보면 운용보수나 기준가가 모두 다르고 펀드 별로 편입된 기초자산도 달라서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임. 그러면 (주)○○○○에는 공모규제 위반에 대한 '고의', '중과실'도 없어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림. 또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과징금 부과 비율이 과도함. 그리고 감정사유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징금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림. 공모규제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규정을 보면 기존에는 50인 이상을 6개월 내 같은 종류의 증권을 합산했는데 개정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은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대해서도 공모규제를 적용함. 그런데 본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개정 자본시장법을 개정 전 행위에 소급적용할 수 없고 개정법을 '같은 종류의 증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거나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음. 그런데 본 건 펀드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부터 무려 1년 전인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설정 판매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관한 규제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임. 본 건 펀드는 '같은 종류의 증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먼저,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정의를 보면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해서 기준가

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르다면 “종류”가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행정법원도 이를 토대로 해서 판매수수료나 운용보수가 다르면 ‘같은 종류의 증권’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음. 결국 투자수익의 차이를 가져 올수 있는 요소가 다르다면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본 건 펀드를 보면 시리즈펀드로 분류된 펀드라고 하더라도 운용보수가 다 다르게 책정되고 그에 따라 기준가격이 동일한 증권이 하나도 없음. 각 펀드가 편입한 DLS도 모두 달라서 DLS 발행번호도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 건 펀드는 ‘같은 종류의 증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임. (주)○○○○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1년 전에 본 건 펀드를 판매했음. 그리고 유사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종류의 기초자산에 편입했다고 해서 공모규제가 적용되리라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우니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을 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주)○○○○은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함. 이처럼 과징금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임. 다만, 이와 달리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더라도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본 건 펀드는 모두 정상 상환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투자자 피해 자체가 전혀 없었음. 이것도 위법성의 감경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하더라도 감경하는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바람.

○ (위원) 처음에 주장하신 것처럼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대

한 소급적용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를 함. 그런데 과거 舊법에 '같은 종류의 증권'과 관련해서 (주) ○○○○ 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계시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판매보수 차이로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증권은 그 종류가 다른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운용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얘기가 없음. 그런데 본 지적된 21건 중에 1건을 제외하고 20건이 다 판매수수료가 동일함. 시리즈1과 시리즈2의 판매수수료가 동일함. '21'은 좀 다르고, 그리고 판매보수는 여기에 적시를 하지 않았지만 판매보수도 다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저희들이 보지 않아야 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 ▶ (진술인) 우선, 말씀을 드리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말한 기준, 예를 들어 판매수수료 운용보수가 다르면 '같은 종류의 증권'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처럼 투자수익에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는 요소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임.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이 건 펀드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준가격을 보면, 설정 직후 기준가격과 상환시 기준가격이 모두 다름.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음. 이것은 운용보수의 차이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수수료가 일부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가격이 모두 다르고 그다음에 편입된 기초자산인 DLS도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그런 다른 차이들을 고려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을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임.

○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편입된 DLS가 동일한 DLS로 인지하고 있는데, 금감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각 시리즈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펀드가 투자한 DLS의 기초자산은 동일함. 기초자산뿐만 아니라 최초 기준가격 설정일, 발행일, 만기상환일, 조기상환시 수익률 모든 구조가 동일함. 차이는 발행 회차만 차이가 있지,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DLS증권을 한 것으로 판단됨.

▶ (진술인) 아까 ○○○○○○ 판결을 언급해 주셨는데 ○○○○○○ 판결을 보면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초자금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라고 언급되어 있고 개별펀드들의 경우 판매구조와 운영보수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운영보수'라는 언급이 있음. '운영보수가 다르므로 같은 종류의 증권을 발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언급이 있음.

○ (위원) 그래서 ◇◇◇◇◇ 건도 그렇고 주선인으로서 은행이 제재를 받기 위해서는 주도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되어서 금감원에 문답서를 요청 드렸고, 금감원에서 (주)○○○○○과

◆◆◆◆ 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 (주)○○○○ 직원들 간의 대화내용을 보면 (주)○○○○에서 주도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함. 저희들도 처음에 본 건과 앞선 제재 건과 상이했던 것이 앞선 건은 운용사가 1건, 한 운용사였는데 지금 본 건의 경우에는 여러 운용사가 번갈아 가면서 조합을 이루고 있음. 그래서 질문을 보면 “동일한 DLS를 발행하는데 왜 굳이 2개의 운용사에 연락을 하셨느냐?”고 했더니 “○○○○ 쪽에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라는 답이 있음. 그리고 ○○○○ 직원 간 대화도 보면 “과장님, 그런데 상품 낼 때 발행사와 과장님이 소싱하고 그다음에 운용사를 보완한 시스템이에요? 이제서야 물어보네요.” 라고 하니깐 “네. 사모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해요.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현실은 그러해요”라는 식의 문답이 계속 나옴. 그래서 (주)○○○○이 주도적으로 시리즈펀드를 만들고 이것을 판매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보시기 바람.

▶ (진술인) 저희가 예전에 이 건이 실제로 금감원에서 2019년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요청받은 바에 따라서 타진을 한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운용사에서 먼저 이 제안서를 보냈고 이 상품의 출시와 관련된 인터뷰를 먼저 제안을 해서 은행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따라서 펀드판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함.

○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

▼▼▼ 차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DLF 관련해서 최초 발행시에는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제안을 받아서 상품을 출시했지만 2회차 출시부터는 발행사와 직접 상품 조건 및 수익률, 모집규모 등에 협의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라는 답이 있음.

- (위원) 지금 금감원의 입장은 2018년 5월1일부터 적용되는 진술서에 의하면 통합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새로운 창설이 아니라 기존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그 당시에 감독당국에서 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하실 때 개정의 취지가 실제로 이 개정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러 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 표명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음. 그러나 그 말씀이 사실은 이 ○○○○○○ 판결에서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음.

- (위원) 주선인으로서 제재가 된 ▶▶사례는 알고 계시는지?

- (보고자) ○○○○○○ 사건에서 ○○○○○○에 대해서는 발행인으로, ◇◇◇◇에 대해서는 주선인으로 조치된 바 있음.

- (위원) 배당수익이나 순서 이런 것이 다 똑같은데 오로지 판매보수나 수수료만 다른 형태의 종류형집합투자기구가

실제로 있는지?

- (보고자) 시장 내 상당수가 존재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법원에서 종류형펀드 내의 각 그룹(Class)을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판단을 하였지만 실무상으로는 각 그룹(Class) 별로 증권신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종류형펀드 전체에 대해 신고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자산운용업체나 감독당국도 종류형 펀드 전체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태임.

- (위원) 종류형집합투자기구를 하나로 다 합산해서 신고서를 내게 하는 것이 확실한지?

- (보고자) 확실함.

▷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 13분 폐회)